

한국 (일반)사회교육의 위기와 대처 방안

이 재 권
충북대학교

I. 문제제기

사람들은 흔히 자기가 살고 있는 시대가 위기의 시대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나는 지금의 한국의 (일반)사회교육¹⁾은 위기를 맞고 있다고 생각한다. 해방 이후의 현대식 교육과정에 정식 영역 혹은 과목으로 편성된 (일반)사회는 70년 가까운 세월 동안 9번 정도의 교육과정 개정 작업을 거치면서 우여곡절도 많았다.²⁾ 가장 큰 문제는 통합사회과와 관련된 것이다. 몇 차례에 걸쳐 일반사회, 지리, 역사, (윤리)가 분과 체제를 취하다, 통합체제를 취하다가 반복해 왔다. 그 과정에서 많은 혼란과 불신 등으로 갈등을 겪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이런 위기와 현재의 위기는 성격이 전혀 다르다는 것이 나의 판단이다. 과거에는 흔히 국어·영어·수학·사회·과학을 주요 5대 학과목으로 분류해 왔다. 그러나 최근 교육부나 각급 학교의 현장 분위기를 살펴보면 넓은 사회과는 물론이고 (일반)사회의 중요도가 점차 약화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외형적으로는 중고등학교에서 사회과 시수의 감소, 대입 학력고사의 선택 과목(사탐) 축소, 교사 임용 인원수의 감소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내부적으로는 학생들의 무관심과 흥미 없음을 지적할 수 있다. 이 글에서 나는 오늘날 한국의 (일반)사회교육이 이와 같은 위기 상황을 맞게 된 원인을 진단하고 그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위기의 원인

주지하다시피 현대사회는 변화의 내용이 광범위하고 그 속도가 매우 빠르다. '인간'과 '사회'를 교육의 주 대상으로 하는 (일반)사회교육은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에 발맞추어 교육과정의 운영, 교과목의 위상, 학습의 내용과 방법에 변혁이 있어야 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못하다. 게다가 한국 사회 및 한국 교육의 특수성 문제가 중요한 변수임에도 불구하고 (일반)사회교육 관련자들이 거기에 잘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오늘과 같은 (일반)사회의 위기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것이다. (일반)사회가 위기의 상황을 맞게 된 원인을 몇 가지로 나누어 설명해 보자.

1) 내가 '(일반)사회'라고 표기한 까닭은 사회교육과, 일반사회교육과 등 2가지 표기가 다 사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는 지리교육과 역사교육은 제외한 표현이다.

2) 최근에 교육과정 수시 개정 체제로 바뀌면서 몇 번의 개정이 있었다고 하는데, 전문가들마저도 바뀐 내용을 잘 모르고 있는 실정이다.

1. 현대사회의 일반적 성격과 관련된 원인

가. 탈 이념적 분위기

내가 생각하기에 (일반)사회교육의 성격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념과 인성교육이다. (일반)사회교육의 궁극적인 지향점은 당시의 사회가 지향하는 인간형을 육성하는 것이다. 현대 한국 (일반)사회의 목표는 건전한 민주시민 육성이다. 민주시민 육성의 방향이 잘못 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현대사회의 분위기가 이념 자체에 대해서 부정적이거나 무관심하므로 (한국의 젊은 학생들도 대체로 그러한데, 한국의 기성세대들은 여전히 이념 편향적이다.) 이념교육을 담당하는 (일반)사회교육도 덩달아 관심 밖으로 밀려나게 되었다는 것이다.

우리의 이념교육 관련 교과나 과목은 아주 많다. 국어, 일반사회, 역사(국사), 지리, 윤리 등의 교과 혹은 영역에서 이념교육을 하고 있다. 교과목의 명칭을 한국어 · 한국사라고 하지 않고, 국어 · 국사 · 국민윤리라고 하는 것만 봐도 이들 교과목에 민족주의적 이념교육의 의도가 내포되어 있다는 짐작을 할 수 있다. 최근에 국사는 한국사로, 국민윤리는 윤리로 바뀌었으나, 국어는 아직 그대로이다. 같은 모르지만 세계에서 이렇게 많은 교과목에서 이념교육을 하는 나라는 없을 것 같다. 나는 이것도 우리나라의 특수성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는 대국들의 틈에 끼어 있는 작은 나라로 역사상 수많은 침략을 받아왔고, 지금도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로서 민족의 정체성과 국가 안보가 중요하므로 이념교육을 많이 시킬 수밖에 없다. 여러 교과(목) 가운데에서도 우리나라에서는 윤리과가 이념교육의 중심교과 역할을 해 왔다. 나는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념교육은 (일반)사회교육에서 중점적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 나의 생각이다.

그렇게 많은 교과목에서 이념교육을 실시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이념교육은 실패를 하고 있다는 것이 일반인들의 생각이다. 최근에 박근혜 대통령까지 나서서 (한)국사교육 강화를 지시한 것만 봐도 이런 분위기를 알 수 있다. 물론 대통령이 이런 것까지 지시하는 것이 적절한가에 대한 논란은 있을 수 있지만, 여기서는 그 문제를 다루려는 것이 아니라 이념교육의 실패를 지적하려는 것이다. 지금 고등학교의 한국근현대사 교과서 집필과 문장 서술을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논란을 봐도 우리의 이념교육이 성공한 것 같지 않다. 이념교육은 특정시대 그 당시의 사회적 분위기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 대체로 진보나 보수 어느 한쪽의 분위기가 강하면 이념교육을 강화하려고 한다. 반대로 중도적 분위기가 강하거나 탈 이념적 분위기가 강하면 이념교육에 대한 관심이 약화된다.

우리나라에서는 1990년대부터 포스트모더니즘의 유행과 문민정부가 탄생하면서 탈 이념적 분위기가 확산되었다. 이때 태어나고 성장한 지금의 청소년 및 학생들은 이념에 대한 관심이 아주 적다. 다만 그 이전 시대에 청소년기와 학창시절을 거쳐 온 학부모와 기성세대들은 이념 과잉으로 진보와 보수의 극단적인 논쟁을 펼쳐가고 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많은 교과에서 이념교육을 실시함에도 불구하고 효과가 적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봐야 하고, 이념교육은 (일반)사회교육에서 중점적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것이 나의 생각이다.

나. 매체의 발달

과거에는 매체가 덜 발달되어 교사가 학생들보다 뉴스나 상식 등의 지식 측면에서 상대적 우위를 차지하고 있었다. 그래서 (일반)사회 수업시간에 선생님이 시사를 정리하여 알려주곤 했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컴퓨터와 스마트폰의 보급 및 정보 검색 기능의 편리성으로 인하여 정보 접근의 평등화 · 평균화가 이루어졌다. 최신 기기 및 정보에 접근하는 능력과 속도는 교사들보다 학생들이 오히려 더 우수하다. 사회 문제를 주로 다루는 (일반)사회 수업의 경우에는 이 점이 특히 중요하다. 이러한 환경의 변화는 과거보다 (일반)사회 교사의 권위를 낮추는 한 가지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고, 이는 과목 혹은 영역 자체의 필요성이나 관심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봐야 한다. 언제 어디서나 마음만 먹으면 손쉽게 정보를 검색할 수 있으므로 교사나 교과목에 대한 의존도가 과거보다 약화되었다.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문제가 있다. 학생들은 대체로 연예인이나 유명 인사들에 대한 신변잡기나 게임 등 주로 가벼운 내용들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다. 그래서 그들이 검색하는 내용도 대체로 그런 것들이다. 많은 학생들은 사회적으로 중요한 이슈나 문제들에 대해서는 거의 무관심하여 내용을 잘 알지 못한다. 학생들의 관심을 어떻게 사회문제로 돌릴 수 있는가가 (일반)사회교육의 성패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한때 신입생 선발을 위한 입시 때 일반사회 · 지리 · 역사 세 전공을 하나의 모집단위로 하여 공동으로 선발을 한 적이 있었다. 면접을 하면서 2학년 때 어느 학과로 진급하고 싶은가를 물어보면 과반 이상의 학생이 역사과(전공)를 선호하고, 그 다음이 지리과(전공)이며, (일반)사회과(전공)를 선호하는 학생이 가장 적었다. 이것은 (일반)사회과(전공)의 선호도가 가장 높았던 과거와는 대조적인 분위기이다. 그 이유를 물어보면 고등학교 역사 선생님의 영향을 받았다는 대답이 가장 많았다. 많은 학생들이 역사교사의 수업 방식이 마음에 들었다는 대답을 했다. 이것은 (일반)사회과(전공)에서 깊이 새겨들어야 할 문제이다. 나는 한국의 역사, 특히 한국사 수업에서 민족주의를 강조하는 감성적 접근이 학생들에게 영향을 준 여러 가지 이유 중의 하나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지리과(전공)을 선호하는 이유를 물어보면 주5일제 수업 실시 이후 가족여행이 많이 활성화되어 여행을 통해서 지리에 대한 관심이 생겼다고 한다.

이것은 매체의 발달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역사 영역이나 지리 영역의 경우에는 동영상 보여줄 자료가 많다. 역사 영역은 각종 역사적 유물 등 시각자료의 활용이 용이하다. 지리 영역도 자연지리를 비롯하여 각종 자료를 보여줄 것이 많다. 이에 비해서 (일반)사회 영역은 상대적으로 동영상 자료를 보여줄 것이 적다. 시각자료를 선호하는 오늘날 학생들의 기호에 비추어 볼 때 재미가 덜한 (일반)사회보다 볼거리가 풍부한 역사와 지리를 선호하는 학생들의 심정을 이해할 수도 있다. 사회과 신입생들의 예가 그렇다는 것은 중고등학교에서의 일반적인 분위기가 그렇다고 봐도 과히 잘못이 아닐 것이다. 이것이 (일반)사회의 심각한 위기상황이라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과거에는 (일반)사회과의 인기가 높았었다. 가장 큰 이유는 해방 이후 근대화 · 산업화를 추진하면서 서구사회에 대한 관심과 그것을 가능케 한 발전 이론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이다. 개인적 차원에서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교육열이 높고, 해방 이후의 혼란기에 계층 상승에 대한 기대가 매우 강했다. 또한 국가 사회적 차원에서 보면, 짧은 기간에 선진국을 따라잡기 위해서는 서구의 이론을 빨리 습득할 필요가 있었다. 대학에서도 사회과학을 전공하면 취직도 용이했다. 그리고 사회가 급격하게 변하면서 여러 가지 사회문제

도 많이 발생하므로 사회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 또한 군사정권과 민주화에 대한 열망 등 굵직한 사회적 이슈가 많았던 것도 한 가지 이유였다. 또 하나는 (일반)사회과 출신들이 공무원이나 고시에 합격하는 경우가 꽤 있어서 그런 이유 때문에 (일반)사회과를 선호하는 학생들도 약간 있었다. 이런 이유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과거에는 (일반)사회과의 인기가 높았었다.

그러나 세월의 흐름에 따라 사회적 환경이 많이 바뀌었다. 지금은 선진국의 문턱에 진입했고, 무엇보다 한두 자녀 가정이 대부분어서 생활에 어려움이 적고, 발전보다는 문화에 관심이 많으므로 사회과학에 대한 관심이 적다. 오늘날 학생들의 성향은 사실 자체에는 그나마 관심을 보이지만, 딱딱한 이론에는 별로 흥미를 갖지 않는다. 컬러TV의 보급과 프로스포츠의 활성화, 한류의 바람 등으로 학생들이 사회문제보다는 (대중)문화에 대한 관심이 많다. 지금의 젊은이들 중 상당수는 미래의 발전보다는 현재를 즐기는 것에 관심이 많다. 이런 분위기가 (일반)사회과와 (일반)사회교육에 대한 관심의 저조로 나타나고 있다.

2. (일반)사회교육 내용 구성의 다양성

(일반)사회는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법 · 철학(윤리) 등 다양한 분야가 망라된 통합교과이다. 이것은 (일반)사회의 독특한 특성이다. 어떤 교과목도 이렇게 많은 배경(모)학문을 가진 것이 없다. 교과목의 이러한 특성은 장단점을 동시에 갖고 있다. 요즘은 통합 · 통섭 · 융합을 중시하는 학문 분위기의 입장에서 보면 (일반)사회는 아주 훌륭한 교과과이다. 그런데 통합사회과에서 항상 지적되는 것처럼 여러 학문들을 단순히 조합해서는 안 되고 융합을 해야 하는데, 이런 기능과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는지는 냉정한 반성과 평가를 해 봐야 한다.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법의 내용을 융합시킬 방법을 찾아야 한다. 이는 매우 어려운 일이다.

그리고 행정학이 (일반)사회 교사자격증 획득의 필수과목으로 들어간 것은 이해할 수가 없다. 임용고사에 행정학을 제외시키고 있기는 하지만 학문적 성격으로 볼 때 행정학은 순수학문이 아니므로 (일반)사회과 교육과정에서 제외시키는 것이 마땅하다. 행정학보다는 오히려 심리학이 추가되어야 한다.

또한 (일반)사회의 내용구성이 다양하다는 것을 현실적 측면과 관련시켜 볼 때는 단점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다. 배경(모)학문이 다양하다보니 뚜렷한 중심점이 없어서 교과목과 관련된 현실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역사과나 지리과의 경우에는 배경(모)학문이 단일하므로 교과목의 이해관계가 있을 때 역사학계나 지리학계와 쉽게 연대하고 협력이 이루어짐을 볼 수 있다. 윤리과의 경우도 자기네 이해관계에 매우 적극적으로 대처한다. 역사 · 지리 · 윤리과와 (일반)사회과의 경우는 이 점에서 확연한 대비를 보이고 있다. 이는 이론적 측면뿐만 아니라, 교과연구회 혹은 교사협의회 등 현직 교사들의 활동에서도 뚜렷한 대비를 보이고 있다. 역사나 지리 교사들의 모임에 비해서 (일반)사회 교사들의 모임이 덜 활발하다. 그러므로 교과목이나 시수의 축소가 이루어지고, 그 결과 교사 임용 숫자가 확 줄어들었는데도 제대로 대처를 하지 못하고 있다. 요즘은 정보의 시대라 임용 숫자가 곧 그 학과의 입시 경쟁률이 되고, 동시에 수험생의 학력 수준을 결정한다. 이는 교과과 존립에 근본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

3. 언어 능력의 감소

인간의 특징은 많지만 학문적 특성과 관련시킬 때는 이성적 능력과 언어사용을 꼽을 수 있겠다. 학문 또는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고도의 사유능력이 있어야 하고, 언어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어야 한다. 현재 한국의 사회과학 지식은 주로 서양의 이론과 학문 내용을 번역한 것이다. 이 때 번역어는 거의 한자를 사용하고 있다. 최근에 순수 한글을 사용하자는 운동이 일어나고 있지만 아직은 미미하다. 지금은 동양학 전공이 아니면 대부분 한글 전용 표기를 하고 있다. 내용이 한자인데 표기만 한글로 하는데서 문제가 발생한다. 학문적 용어들은 대부분 학자들이 지어낸 말(조어)이라 일상생활에서 잘 사용하지 않는 것들이다. 사회과학 용어들도 대부분 그렇다. 그것을 다시 한자어로 번역하여 한글로 표기를 한다. 기존의 번역어들은 대부분 일본의 학자들이 만든 것들이다. 동양의 고전 속에서 찾아낸 말들도 있지만, 대부분 그들이 한자를 조합하여 만든 일본식 한자어이다. 사회(社會)라는 단어만 해도 그렇다.

요즘 학생들은 인터넷용어에 익숙하여 어려운 어휘를 잘 모르고 그래서 그런 어휘를 사용하지도 않는다. 우리나라는 어른들도 그렇지만 학생들도 책을 읽지 않기로 유명하다. 기껏해야 만화 · 판타지 소설 · 무협지 · 실용서 · 자기개발서 등이다. 이런 종류의 책들 속에는 어려운 어휘가 많이 등장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런 책을 읽어도 어휘력 향상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런데 교과서와 같은 책들을 보면 죄다 어려운 말들로 썩어져 있다. 그래서 읽어도 뜻을 이해하기가 어렵고, 따라서 흥미를 갖기가 힘들다. 공부를 하면서 가장 중요한 점은 개념을 이해하는 것인데, 어휘력이 부족하고 단어의 뜻 자체도 잘 모르므로 흥미를 갖기가 힘들다. 요즘 사회과학이 가장 어렵다는 학생들이 많이 늘어나는 것도 언어 능력과 깊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한다.

4. 교육 행정적 측면

가. 자격증 남발

몇 년 전에 예체능과 실과 계열의 시수가 줄어들어 해당교과의 교사들에게 부전공 연수를 거쳐 자격증 변경을 시켜준 일이 있었다. 이것을 자격증연수라고 부른다. 그 때 부전공 연수를 가장 많이 한 교과가 공통사회 · 윤리 · 컴퓨터 · 한문 등이다. (또한 교육대학원에서도 자격증을 수여하고 있다. 특히 (일반)사회과의 경우에는 정치(외교)학과 · 경제학과 · 사회학과 · 문화인류학과 · 법학과 · 행정학과 등 다양한 전공에서 교직 이수자가 배출되고 있다.) 단기간의 연수로 자격증을 부여하고 교과 수업에 투입함으로써 수업의 부실화가 발생했고, 이는 학생들에게 사회과에 대한 불만과 무관심을 낳게 만들었다. 이는 또한 신규 교사 임용 숫자의 감소로 이어졌다.

이것은 명백히 교육 행정의 잘못이다. 당시에 나를 포함한 일부의 교수들은 과원 교사의 처리에 신중하게 대처할 것을 주장했었다. 당시에 상담전문교사 연수와 임용이 있었는데, 과원 교사들을 상담교사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었다. 지금은 진로전문상담교사 자격증까지 신설되었다. (현재 상담전문교사와 진로전문

상담교사 자격증은 교육학과와 부전공연수를 통해서 주어지고 있다.) 지금 행정당국에서는 진로와 직업 교과목을 강조하고 있다. 현재는 창의재량 시간을 활용한다고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결국에는 사회과 시수의 축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교육부에서 자유학기제와 진로교육을 강화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기존의 학과목 시수를 줄인다면 그 대상은 또 다시 사회과가 될 가능성이 높다. 최근 가정과는 자유학기제와 진로교육을 자신들이 맡아서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한국교육신문, 2013.7.15.4면). 사실 진로교육은 성격상 (일반)사회와 관련성이 가장 많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데 (일반)사회과는 이 문제에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가?

부전공 연수를 받은 교사들은 사회과를 가르치고, 시수가 줄어든 정통 사회과교사들이 타 전공의 부전공 연수를 받고 상담전문교사나 진로전문상담교사로 교과목 변경을 시도하는 예를 주위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이는 모순이다.

나. 학교장 권한의 교육과정 자율화

이명박 정부 시절에 교육부는 학교에 자율권을 확대한다는 명분으로 학교장에게 20%의 교육과정 편성 자율권을 부여했다. 그 결과 영어와 수학의 시수는 늘어났고, 대부분의 학교에서 사회과 시수가 줄어들었다. 이는 처음부터 예상된 일이었다. 시작 전부터 예상된 일이었다. 사회과 교사들의 반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학생들의 기초학력 신장과 학부모들의 과외비 부담을 경감시켜주겠다는 논리로 밀어붙였다.

결과는 예상대로였다. 당초에는 국어도 시수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으나 국어는 거의 증감이 없었으며, 과학 중점학교 지정 등으로 인하여 과학의 시수는 약간 늘었다고 한다. 전국 대부분의 학교들이 수학과 영어의 시수를 늘리는 것이라면 이것을 학교장 자율이라고 이름붙이는 것도 민망하다. 그 결과 영어와 수학 교사의 신규 임용은 엄청 늘어난 반면, 전체 사회과의 신규 교사 임용 숫자는 대폭 줄어들었다.

이제 학생 수의 급감으로 학급이 줄어들고 있다. 그러면 지리와 (일반)사회 교사의 신규 채용 인원은 또 줄어들 것이다. 역사는 한국사 수능 필수화 조치와 맞물려 2013년 12월 임용고사 선발 인원이 대폭 늘어났다. 현장에서는 당장 2014년 1학기 교원 인사이동에서 관리자들이 역사교사를 선호하고 있다. 이런 사회적 흐름이 이번 대학 입시에서 사범대학 역사교육과 입시 경쟁률의 상한가로 나타났다. 그리고 만약 사회과 교사의 필요 인원이 2명에서 1.5명으로 줄어든다면 사회과교사는 1명으로 하고, 나머지 0.5명은 기간제 교사를 채용하는 것이 아니라, 최근에 많이 뽑아놓은 국·영·수 교사들에게 부전공 연수를 시켜서 사회과를 가르치게 할 공산이 크다. 이걸 나의 단순한 추측이 아니고, 현장에서 지금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현실이다. 이것은 내가 모 학교 교장선생님의 말씀을 간접적으로 전해들은 얘기이다. 그러면 과거 공통사회 부전공 연수의 악몽이 되풀이되는 것이다.

다. 대입 수학능력 시험(수능) 교과목 축소

최근에 대학 입시의 다양화와 학생들의 학업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취지로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선택과목 축소가 이루어졌다. 국·영·수는 그대로 유지되고 사회탐구와 과학탐구 영역의 과목이 대폭 축소

됐다. 한국의 초·중·고 교육은 대학 입시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므로 수능에서 제외되는 과목은 제대로 교육이 안 된다. 고등학교에서 선택한 과목, 그 중에서도 학생 자신이 시험 과목으로 선택한 것이 아니면 관심도 없고, 제대로 공부를 하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학생들에게 과도한 학습 부담을 주는 것은 문제이지만, 쉽게 과목 축소의 방법을 선택한 것은 문제가 있다. 과목이 축소되면 나머지는 어떻게 할 것인지 깊은 고민이 있어야 한다. 예컨대 (일반)사회 전체를 한 과목으로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법 등 전 영역의 문제를 모두 출제할 것인지, 이 가운데 특정 분야를 집중적으로 출제할 것인지 등에 관하여 토론이 있은 후에 결정을 해야 하는데, 쉽게 후자의 방법을 선택했다. 교육부의 이런 결정에 대해서 관련 당사자들은 강 건너 불구경하는 꼴이다. 서울대학교가 한국사를 입시의 필수 과목으로 지정한 까닭에 고등학교의 상위권 소수 학생을 제외하고서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한국사를 선택하지 않아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는 것이 좋은 예이다. 이처럼 한국의 수능 시험은 양면성이 있다. 수능에서 제외되면 공부를 안 하고, 수능에 포함되면 이론 암기 위주의 공부가 되어버린다.

대통령의 역사교육 강화 지시에 따라 한국사가 수능의 필수 과목이 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 처음에는 사탐 선택 2과목 중 한 과목이 될까봐 (일반)사회·지리·윤리 등 관련 당사자들이 잔뜩 긴장을 했는데, 다행이 사탐 선택과는 별개의 독립 교과 자격으로 필수과목으로 지정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관련 교과 당사자들은 일단 한시름 놓게 됐으나 이런 문제는 언제 또 다시 어떤 형태로 나타날지 예측하기 어렵다.

한국사를 수능 필수과목으로 지정하는 것과 관련하여 또 다른 문제가 있다. 한국사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한국사의 시수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다. 이것은 수능 필수과목 지정과는 성격이 다른 문제이다. 전체 시수가 고정되어 있는데 정말로 한국사의 시수를 늘리면 다른 과목의 시수를 줄여야 한다. 지금 분위기에서 전체 시수를 늘리는 것은 기대할 수 없다. 그렇다면 다른 과목의 시수를 줄여야 하는데, 결국 나머지 사탐 영역의 과목에서 줄일 가능성이 높다. 이 문제도 현실적으로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수능 시험에서 사회·문화 과목을 선택하는 학생의 비율이 지나치게 많다는 것도 문제이다. 고등학교의 (일반)사회 영역이 정치, 경제, 법, 사회·문화 네 과목이었다가 최근에 정치와 법이 합쳐져서 법과 정치, 경제, 사회·문화 세 과목으로 줄어들었다. 그런데 많은 학생들이 수능 시험에서 사회·문화를 선택하므로 학교에서도 그 과목을 가르치는 학교가 많다. 법과 정치, 경제 과목을 선택하는 학교들이 적다는 것은 그만큼 (일반)사회의 영향력이 축소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극단적으로 과장해서 말하면 (일반)사회과는 곧 사회·문화과가 되는 셈이다. 이 점에 대해서도 깊은 고민과 토론이 필요하다.

라. 집중이수제

교육부는 학생들의 수업 부담을 줄여주고 교육 효과를 높인다는 논리로 집중이수제를 실시하고 있다. 한 학기에 8과목 이내로 교과과정을 편성하도록 했다. 집중 이수제도 시작 전부터 학교 현장에서 강한 비판이 제기되었으나, 교육부는 귀를 막고 일방적으로 몰아 붙였다. 집중이수제는 너무나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었는데, 현재는 예체능교과는 예외를 인정하는 선에서 영겨주춤하고 있다.

집중이수제는 학생들의 발달 상황에 맞지 않는다. 오히려 학생들에게는 수업과 시험 부담이, 교사들에게

는 진도 부담이 늘어났다. 교육 효과도 낮아졌다. 학교 현장에서 많은 혼란이 벌어지고 있다. 교사 수급에도 많은 차질이 벌어지고 있다. 여기에서도 사회과가 가장 큰 피해를 입었다. 정규직 교사의 채용 대신에 비정규직 기간제교사의 채용이 크게 확대되었다. 순회교사도 많이 늘어났다. 이런 피해는 고스란히 넓은 사회과의 몫으로 돌아왔다. 사회과도 집중이수제에서 벗어나도록 노력해야 한다.

마. 임용고사

모든 시험제도에는 문제점이 있고, 장단점이 있다. 인간이 만든 모든 것(제도)이 그렇듯이 시험제도도 완벽한 것은 없다. 인류 역사에 다양한 시험제도가 있었는데, 대충 크게 나누면 필답고사와 비필답고사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후자에는 다시 추천·서류전형·면접·실기 고사 등이 있다. 그리고 필답고사와 비필답고사 방법을 혼합하는 경우도 있다. 필답고사의 장점은 관련 지식이 많은 사람을 객관적으로 선발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실무능력을 측정할 수 없고, 인간성을 모른다는 것이 단점이다. 반면에 비필답고사는 실무능력을 측정하기가 쉽고 인간성을 파악하기가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선발권자의 주관과 편견, 그리고 무엇보다 정실이 개입될 여지가 많다는 것이 단점이다. 과거 공직자의 선발 방식(選舉制度)에 대한 역사를 살펴보면, 두 가지 방법이 번갈아 사용된 예가 많음을 알 수 있다. 오늘날에는 두 가지의 혼합방식이 많이 사용되고 있다.

현재 한국에서 시행되는 교사 선발을 위한 임용고사도 두 가지를 혼합한 방식이 사용되고 있다. 지난해까지는 1차 선택형문항(객관적) 시험, 2차 약속과 논술 등 서술형 시험, 3차 수업지도안 작성과 실제 수업 시연 및 면접 등 3단계로 이루어졌었다. 금년(2013)에는 선택형문항(객관식) 시험이 없어졌다. 나는 이것은 잘한 것으로 생각한다. 만약에 선택형문항(객관식) 시험을 보려면 문제는행식으로 하여 문항 수를 몇 배로 대폭 늘려야 한다. 금년에는 서술형 시험으로 전공 지식을 측정하고, 수업지도안 작성과 수업 시연으로 실무능력, 즉 교사에게 가장 중요한 수업능력을 측정하고, 마지막으로 면접을 하여 교사로서 적합한 인성을 파악하겠다는 것이다. 여기서 서술형 지식 측정과 실무능력(수업능력)을 측정하는 것은 우수한 교사를 선발하기 위하여 당연하고 측정에 별 어려움이 없다.

그런데 면접시험은 문제가 많다. 면접에서 집중적으로 봐야 할 것이 교직자로서의 사명감과 인성 부분인데, 짧은 시간에 이것을 평가하기는 쉽지 않다. 면접관이 족집게 도사나 관상가 또는 정신분석학 전문가가 아닌데 몇 마디의 대화로 수험생의 인성이나 사명감 등 정신적·내면적 요소를 평가한다는 것은 지극히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형식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특히 교직의 특성상 사명감과 인성이 다른 직업보다 훨씬 크게 요구되는 직업이다. 그런데 측정방법의 어려움 때문에 소홀히 지나가는 것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왜냐하면 교사는 실력(經師)과 인성(人師)을 함께 갖춘 인물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학교는 지식만 가르치는 곳이 아니고, 인성도 함께 가르치는 곳인데 인성은 말(언어)로도 가르치지만 교사의 인격과 출선수범에 의해서 더 많이 배울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현행 임용고사는 지식의 측정에 치중되어 있어, 예비교사들의 인성 교육을 소홀 할 수밖에 없다. 더구나 민주시민 양성이라는 이념교육을 담당할 (일반)사회 교사의 선발에서는 인성의 평가가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되어야 한다. 교사가 지식적으로 민주주의에 대하여 아무리 잘 가르쳤더라도 그 교사가 반민주적인 행위를 하면 그 교사의 교육은 효과가 반감된다. 그러므로 (일반)사회 교사의 인성은 특히 중요하다.

5. (일반)사회의 내부적 요인

가. 교육과정 총론과 교과목 명칭의 문제점

(일반)사회과 교과교육 전공자들 중에는 (일반)사회가 한국교육의 중심 교과(혹은 중핵교과)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다. 그 이유는 한국 교육의 목표와 (일반)사회교육의 목표가 모두 동일하게 민주시민 양성이기 때문이라고 한다. 과연 그럴까? 내 생각에 이런 주장은 아전인수 격으로 들린다. 한국 교육의 목표가 민주 시민 양성이면, 이런 목표는 모든 교과들의 교육의 총합에 의해서 달성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는 비단 (일반)사회교육만의 문제가 아닌 것이다. 물론 타 교과에 비해서 친근성이 높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교과가 생명력을 가지려면 타 교과와 차별성을 가져야 하고, 구체적이어야 한다. 그런데 (일반)사회과 교육과정 총론에 제시된 (일반)사회의 성격과 목표를 보면 온갖 미사여구를 모아 놓아 매우 추상적이다. (이는 한국의 헌법과도 비슷하다. 한국의 헌법은 세계 각국의 헌법에서 좋은 말들을 모두 모아놓은 훌륭한 문장이다.) 그래서 한국교육과정 일반(전체) 총론과 거의 비슷하다. 그러나 타 교과의 입장에서는 이런 교과는 없어도 된다는 역공을 할 수도 있다. 한국교육과정 총론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타 교과와 차별화되는 (일반)사회 교육과정 총론을 수립해야 (일반)사회의 정체성이 확립된다고 생각한다.

이와 같이 (일반)사회 교육과정 총론이 추상성을 띠게 된 원인을 나는 교과목의 명칭과 관련이 많다고 생각한다. '사회'라는 단어의 의미가 교과목의 명칭으로 그리 적합하지 않다. 정치·경제·사회·문화·법·지리·역사·윤리라고 할 때의 '사회'는 좁은 의미이고, 정치·경제·사회·문화·법을 포함한 사회 전반이라고 할 때의 '사회'는 넓은 의미이다. 그래서 혹자는 사회교육과를 사회학교육과로 오해하기도 한다. 역사교육과와 지리교육과 쪽에서는 사회교육과라는 명칭을 싫어한다. 왜냐하면 사회라는 말 속에 지리와 역사도 포함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생겨난 말이 일반사회라는 용어이다. 실제로 어떤 대학에서는 일반사회교육과라는 학과명을 사용하기도 하고, 중고등학교에서도 이 표현이 자주 사용되며, 교사자격증에도 일반사회전공이라고 표기된다. 어떤 분은 '사회'보다 '일반사회'가 더 넓은 의미라고 주장하지만, 그러나 일반사회는 사회의 중복 표현에 불과하다. 대학에서 일반물리·일반화학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는데, 이 말은 물리학개론·화학개론이라는 의미와 같다.

지리교육과와 역사교육과가 독립된 마당에 그것들을 다 포괄하는 '사회'라는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그들과 갈등을 일으키면서 굳이 애매한 용어를 교과목명으로 계속 사용할 것인지 깊이 고민해야 할 것이다. 콩트가 사회학 또는 사회과학이라는 용어를 만들어서 유행시킬 당시에³⁾ 이에 불만을 갖고 정신과학·문화과학·역사과학·인문과학·인간과학 등 다양한 용어를 만들어서 사용한 학자들이 있었다. 그들도 사회학이라는 말이 학문의 명칭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했다.

처음에 이 논문의 제목에서 '(일반)사회(과)교육' 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도 나는 많은 고민을 했다. ① '사회과' 아래 ② 지리·역사·(일반)사회가 있고, 그 밑에 ③ 한국지리·세계지리·경제지리, 한국사·세계사·동아시아사, 경제·법과 정치·사회 문화 등이 자리를 잡고 있다. 여기에서 ①번을 '교과'라고

3) 콩트는 처음에 사회물리학이라는 용어를 만들어서 사용했는데, 벨기에의 사회통계학자인 아돌프 께틀레가 도용(표절)했다고 생각하여 다시 사회학이라는 용어를 만들었다.

하면, ②번과 ③번 가운데 무엇을 ‘과목’ 혹은 ‘영역’이라고 불러야 하는가? ②번을 영역, 즉 지리영역·역사영역·(일반)사회영역이라 부르고, ③번을 과목이라고 하면 되는가? 예컨대 (한)국어와 같은 단일 교과 의 경우에는 이런 혼란 혹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국어과의 경우에는 교과와 과목의 구별이 명확하다. 이처럼 단일 교과는 두 단계인데, 사회과는 세 단계이다. 그래서 혼란이 생기는 것이다. 이것도 사회과가 통합교과이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이다.

그리고 ‘사회교육’이라는 표현은 교육학의 하위 분야인 사회교육(평생교육)과 혼동을 일으킨다. 후자와의 혼동을 피하기 위해서는 사회과교육이라고 해야 한다. 사회과교육이라고 하면 역사와 지리도 포함하는 표현일 수도 있으므로 ‘일반사회과교육’이라고 표현해야 한다. 그런데 바로 앞의 논의에 의하면, ‘(일반)사회과 교육’이 옳은가? 아니면 ‘(일반)사회교육’이 옳은가?

여기에는 3가지 차원의 문제가 섞여 있다. 첫째는 중고등학교의 교과 및 교과목 명칭의 문제이고, 둘째는 사범대학에서 학과 명칭의 문제이며, 셋째는 교과교육학의 학문적 이름의 문제가 혼재되어 있다. 이 3가지 차원 중에서 어디에 중점을 두고 말하느냐에 따라서 용어가 달리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맥락을 고려하지 않고 들으면, 듣는 사람은 혼란스러울 수도 있다.⁴⁾

나. 한국 (일반)사회교육의 내용

한국 (일반)사회교육의 내용은 지나치게 이론 중심적이다. 그것도 서구적 이론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 토마스 쿤(Thomas S. Kuhn)이 주장한 것처럼 사회과학에서는 정상과학(혹은 통상과학 normal science)에 도달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서구의 사회과학 이론 중심으로 교육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물론 헨슨(N. R. Hanson)의 말대로 “사실은 이론 의존적”이므로 이론을 가르치는 것이 무가치하다는 것은 아니다. 또한 한국의 자생적 이론이 거의 없으므로 서구의 이론을 수입해서 가르칠 수밖에 없는 사정을 모르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가능하면 한국의 현실과 관련을 지어서 가르쳐야 학생들의 흥미와 관심을 북돋울 수 있다. 물론 이 모든 것이 수능 시험과 관련이 있음을 모르는 바도 아니다. 그렇지만 서구적 이론 중심 교육이 한국의 (일반)사회교육의 정체성과 관심을 약화시키는 것만은 사실이다. 왜냐하면, 서구의 이론 중에는 한국의 사회 현실과 괴리가 있는 것들도 있고, 오늘날의 학생들은 과거에 비해서 근대화나 선진국 진입에 대한 열망이 훨씬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론에 대한 관심이 적다.

다. 수업 방법

위에서 말한 것처럼 (일반)사회과의 교육 내용이 이론 중심으로 편성되어 있고, 수능 시험 때문에 대체로 지식 전달 위주의 일방적인 강의식 수업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교육과정 편성 지침과 교과서에는 토론식 수업을 적극 활용하라고 권고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위와 같은 이유들 때문에 지금도 여전히 주입식 수업 방법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그리고 교육과정 내용이 지나치게 많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내

4) 이 글에도 이 세 가지 차원이 혼재되어 있어서 독자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음을 솔직하게 고백한다. 논문을 제대로 쓰려면 이 세 가지 차원을 나누어서 정교하게 다루어야 한다. 그러나 이 글에서는 그러지 못했다. 독자들의 양해를 구한다.

용이 많으므로 교과서의 내용을 모두 다 가르치기 위해서는 강의식 수업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것도 수능과 관련이 있다. 수능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교과서의 모든 내용을 다 가르쳐야 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한국 교육의 전반적인 문제점이고 모든 교과목의 공통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현재 위기를 맞고 있는 (일반)사회의 경우는 다른 교과목에 비해서 훨씬 더 심각한 문제라는 것이 나의 생각이다.

라. 과학기술에 대한 무지

나는 오늘날 인문학 · 기초학문의 붕괴 원인에는 인문사회 전공자들의 과학기술에 대한 무지가 큰 몫을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과거 전근대 사회에서는 인문학이 중심이었다. 그러나 산업혁명 이후에는 사정이 달라졌다. 과학과 기술이 합쳐져 과학기술이 되었고, 과학기술은 곧바로 상품의 개발로 이어지고, 그 결과 인간의 생활에 변화가 오며, 사회구조의 변화와 인간 의식의 변화로까지 이어진다. 물론 과학기술의 발견과 발명에는 인간의 의식이 개입되므로 달같이 먼저나 닭이 먼저냐의 논쟁이 있을 수 있다. 어쨌거나 과학기술에 대해서 무지하면 현대사회를 설명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우선 고등학교 때의 문과/이과 구분이 문제이다. 수요자 중심의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교육부는 학생들이 공부하기 힘들다고 하면 안 해도 된다고 하며 수능 과목에서 제외시켜주는 천사이다. 이과 학생들은 사탐 과목의 선택을 안 해도 되고, 문과 학생들은 과탐 과목의 선택을 안 해도 된다. 세계 어느 나라에서 이런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나라가 있는지 궁금하다. 지금 세간에서는 인문학적 상상력이 필요하다고 외치는데, 우리는 그런 것 안 해도 좋다는 말인가? 또한 현대사회는 뭐니 뭐니 해도 과학기술이 주도하는 사회이다. 이것이 반드시 좋거나 바람직하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운명이다. 인문사회 전공자들이 과학기술에 대해서 무지하면 현대 사회와 인간을 설명하기가 어렵다. 그런데 동북아시아의 전통은 인문학이 우세하고 수학과 자연과학이 약하다.

거기에도 우리는 고등학교 때 문과/이과로 나누어 문과 학생들이 수학과 과학 공부를 소홀히 하고 있다. 대학에서도 교양 선택으로 적당히 학점을 취득하고 끝난다. 훗날 전문가가 되어서는 자기 전공에 간혀 옆을 돌아 볼 여유가 없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전공 이외의 분야에 대해서 무지하게 되는데, 이것이 학문 발전을 가로막는 주범이다.

이에 비해 서양의 학문사를 보면, 플라톤이 세운 아카데미아의 현판에 “기하학을 모르는 자는 이 문을 들어서지 말라”는 명구가 새겨져 있었다고 한다. 서양의 학문사에서 철학자는 대부분 수학자였다. 그리고 근세 이후에는 많은 과학자들이 철학자였다. 우리의 경우 이런 예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극히 드물다. 그래서 우리의 역사에는 인문학적 전통이 우세하고 사회과학과 자연과학이 열세이다. 아직도 우리는 우리가 만든 사회과학 이론체계를 갖고 있지 못하다. 우리의 이론체계를 갖기 위해서는 어릴 때부터 우리의 눈으로 우리 사회를 분석하는 힘을 길러야 한다. 이것은 수업의 방법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최근에 교육부에서 발표한 대입 수능 개선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문과/이과 구분 없이 공통으로 시험을 치르겠다는 계획인데, 이는 매우 잘한 일이다. 시험뿐만 아니라 고등학교에서 문과/이과를 나누지 말아야 한다. 학부모나 이해 당사자들의 반응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Ⅲ. 해결 방안

1. 현대사회의 일반적 성격과 관련된 문제

현대사회의 탈 이데올로기 분위기는 (일반)사회교육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억지로 이데올로기 찬양의 분위기를 만들어낼 수는 없고, 그보다는 탈 이념적 분위기에 적합한 이념 교육과정을 만들기 위한 깊은 성찰을 해야 할 것이다. 과거에 국민윤리가 사회주의 비판에 초점을 맞춰 소극적·부정적 이념교육을 주로 했다면, (일반)사회는 민주주의와 민주시민 육성에 대한 적극적인 이념교육을 담당해야 한다. 이것은 정치 파트에만 국한해서는 안 되고, 경제·법·사회·문화 등 (일반)사회의 전 영역에 해당된다. 예컨대 경제교육에서 자본주의 경제학 이론만 가르쳐서는 안 된다. 인간은 합리적으로만 경제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다. 경제 정의 및 윤리 의식과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경제생활을 하여 민주시민의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요즘 한국근현대사 교과서 논쟁을 보면서 마음이 답답하다. 최근에 동아시아에 민족주의를 강조하는 신 냉전적 분위기가 팽배하다. 중국·일본과 민족주의 경쟁을 하면 가장 불리하고 손해를 보는 것은 한국이다. 두 나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약소국인 한국은 그들과 정면으로 부딪쳐서는 안 된다. 우리는 그들의 조정자 역할을 하며 실리적 외교를 해야 한다. 따라서 한국은 단힌(폐쇄적) 민족주의나 세계화주의에 매몰되지 말고, 민주주의·세계화·열린(개방적) 민족주의 사이의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이념교육을 해야 한다. 중요한 것은 사고의 유연성을 갖게 해야 한다. 우리 사회는 아직도 조선시대 성리학자들의 논쟁 행태를 벗어나고 있지 못하다.

매체의 발달과 관련해서는 정보 접근과 습득 면에서는 교사와 학생의 차이가 없으므로, 수업에서 효과적인 활용 방안에 대한 모색으로 접근해야겠다. (일반)사회는 지리나 역사에 비해서 동영상 활용할 일이 적겠지만, 그래도 학생들의 흥미와 수업동기를 유발하기 위해서는 수업에 활용할 소재를 개발하고 찾아내야 한다. 그리고 인터넷이나 SNS 등에서 정확한 정보와 잘못된 정보 등을 찾아 구별하는 게임을 한다든지, 어떻게든 매체를 수업에 활용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또한 이런 과정 속에서 윤리의식을 길러주어야 한다.

2. 내용 구성의 다양성과 (일반)사회 편제 문제

(일반)사회가 다양한 학문을 배경으로 한 통합교과라는 사실은 교과목의 운명이다. 이것은 장단점을 동시에 갖고 있으므로 단점을 극복하고 장점을 살리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해야 한다. 현실적 차원에서는 (일반)사회의 구심점은 아무래도 서울대 사회교육과가 맡아주어야 할 것 같다. 그 이유는 서울대 사회교육과 출신의 교수와 연구원 숫자가 가장 많기 때문이다. 이 때 (일반)사회교과교육학 전공뿐만 아니라, 정치·경제·사회·문화·법·철학(윤리) 전공을 함께 아우를 방법을 찾아야 한다. (일반)사회교과교육학의 차원에서만 접근하면 이 문제를 풀 수 없다. 또한 이론적 차원에서는 사회윤리와 사회과학방법론의 강화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현재 사범대학 사회교육과의 교육과정에는 해당 교과목의 강좌가 너무 적다.

최근에 정부에서 한국사를 수능 필수 과목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이 기회에 넓은 사회과의 편제 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한다. 사회과는 미국에서 민주시민을 기르기 위해서 만들어진 교과이다. 미국의 사회과 속에는 정치·경제·사회·문화·법·심리·지리·역사·윤리 등 다양한 학문 영역들이 포함되어 있다. 그것은 미국사회의 특수한 사정이 반영되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해방 이후 미군정시대 때 사회과가 정식 교과로 채택되었다. 처음에는 일본식 이름을 빌려와서 공민이라고 부르다가 지금은 사회 또는 일반사회라고 부른다. 나는 개인적으로 교과목의 명칭으로는 공민(公民)이 더 분명한 의미를 담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초등학교는 통합교과로 '시민생활'이라는 명칭이 좋을 듯하다.

한국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통합사회과 혹은 공통사회과와 분과 사회과의 혼란과 갈등이다. 대체로 (일반)사회과 쪽에서는 통합사회과 체제를 선호하고, 그 외 역사·지리·윤리 쪽에서는 분과체제를 선호한다. 한국 사회과의 역사에서 이 문제는 가장 유명한 논쟁의 하나이다. 이 문제는 주기적으로 등장했다가 사라진다. 이 문제가 발생하는 근원은 사회과의 내부에 있지 않고, 사회과 교과목의 밖에 있다. 세계의 사상 혹은 사조의 흐름은 이성 중심과 감성 중심의 경향을 반복한다. 이에 따라서 학문 세계에도 분과지향과 통합지향을 반복한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서양의 사조를 한 발 늦게 받아들이다 보니 저들과는 늘 엇박자가 난다. 저들이 통합하면 우리는 분과하고, 저들이 분과하면 우리는 통합한다. 이는 비단 사회과만의 문제가 아니고, 사회 전반적인 사조의 흐름이 다 그렇다.

그런데 나라마다 역사와 문화가 다르므로 사회과를 미국에서 들여왔다고 하더라도 언제까지 미국과 같게 운영해야 할 필요는 없다. 이제 우리의 사회과 역사도 70년 가까이 되므로 우리의 독자성을 가질 때가 되었다고 본다. 우리는 미국과 비교할 수 없는 긴 역사를 가진 나라이다. 미국이야 역사가 짧은 나라이므로 역사를 사회과에 포함시키지만, 우리나라는 수 천 년의 역사를 갖고 있고 또한 역사학의 역사(사학사)도 매우 길다. 최근에는 일본의 역사왜곡과 중국의 동북공정 등으로 한국사에 대한 관심이 높다. 거기다 미국에서는 실증주의 사학의 우세로 역사학을 사회과학으로 분류하는 경향이 강하지만 우리는 전통적으로 문·사·철을 대표적인 인문학으로 여긴다. 우리도 미국 사회과의 전통을 따라서 역사를 사회과 속에 포함시키려는 문제 때문에 자주 갈등이 발생한다. 나는 우리나라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역사를 사회과에서 독립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교과체제의 대분류에서도 역사를 사회 영역이 아니라 인문 영역으로 변경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번에는 지리과의 문제를 생각해 보자. 지리는 대영제국시대에 영국이 식민지 경영의 정당성을 홍보하기 위해서 만든 이념교과이다. 영국에서는 종교와 지리, 특히 정치지리(지정학)를 이념교육의 핵심교과로 여긴다. 우리나라는 대륙과 해양을 연결시켜주는 지정학적으로 특이한 반도이다. 그러므로 주변의 나라들이 우리의 국토를 빼앗으려 탐을 내고, 그래서 자주 침략을 해왔다. 조선시대 중반기까지 성리학자들은 소중화주의 혹은 조선중화주의 사상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조선 후기의 실학자들은 민족의 자주성과 주체성을 각성하기 시작했고, 그것의 구체적인 실천 방법의 하나로 국토지리에 대한 관심과 연구를 활발하게 했다. 더구나 일제강점기 때는 지리(학)에 대한 공부 자체가 독립운동의 방법이였다. 해방 이후 지금까지도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때문에 지리에 대한 관심은 그 자체가 국민들의 애국적 행위가 되었다.

그리고 사범대학에 지리교육과가 독립 학과로 존재한 역사도 매우 길다. 지금에 와서 지리과를 사회과에 포함시키려고 해 봐야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 또한 지리학의 학문적 특성 중의 하나는 문과/이과의 이

중성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즉 지리학은 자연지리학과 인문지리학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대학교에 따라 지리학자가 사회과학대학에 소속된 경우와 자연과학대학에 소속된 경우가 있다. 그러나 중고교에서는 편의상 사회과학 영역에 포함시키는 것이 좋겠다.

마지막으로 윤리과에 대해서 살펴보자. 윤리과는 복잡하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동북아시아에서는 전통적으로 윤리가 가장 중요한 교과였다. 그리고 일본에도 '수신'이라는 교과가 있다. 현대 한국에서는 독일의 정치교육을 모방하여 국민윤리교과를 만들었다. 교과 편제상 윤리는 사회과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독립교과로 편성되어 있다. 그러나 학교현장에서는 사실상 사회과 속에 포함시키는 것이 일반적이다. (일반)사회교사가 윤리를 가르치는 경우도 적지 않다. 국민윤리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한국에만 있는 교과이다. 독일의 정치교육을 모방했다고는 하지만 국민윤리와 정치교육은 다르다. 정치교육은 독일의 이념교육이다. 독일에는 철학이 인문계고등학교의 중심교과이다. 정치교육은 사회과학 영역이고, 철학은 인문학 영역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국민윤리는 사회과학도 아니고 인문학도 아니다. 바꾸어 말하면 사회과학과 인문학을 합친 통합교과이다. 사회과학 영역은 독일의 정치교육과 거의 비슷하다. 그래서 (일반)사회와도 거의 흡사한 내용이다. 그런데 독일의 정치교육은 민주주의 이념을 가르치는 적극적인 교육이다 그래서 우리의 (일반)사회와 공통점이 더 많다. 그러나 한국의 국민윤리는 사회주의 이념을 비판하는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이념교육이 주축을 이루었다. 여기에 독일의 정치교육과 한국의 국민윤리교육의 차이가 있다.

국민윤리의 인문학 영역은 철학 및 윤리적인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내용을 다시 나누어보면 서양 철학사, 중국철학사, 한국철학사 세 영역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냉전의 분위기가 사라지고 탈냉전의 분위기로 바뀌자 교과목 명칭을 자의반 타의반으로 국민윤리에서 윤리로 바꾸었다. 교과목 명칭을 바꾸려는 외부의 압력도 많았다. 그러나 교과 내용 구성 체계는 대체로 과거와 비슷하다. 윤리과는 고등학교의 경우 <시민윤리>, <전통윤리>, <윤리와 사상> 등 세 권의 교과서로 되어 있는데, 수능시험의 문제는 거의 대부분 <윤리와 사상>에서 출제된다. 그러므로 고등학교 현장에서는 나머지 두 권의 교과서는 대충 훑어보고 지나가며 <윤리와 사상> 교과서만 집중적으로 공부한다. 그렇다면 나머지 두 권 교과서의 정체성이 의심스럽다.

한편 교과목 명칭이 국민윤리에서 윤리로 바뀐 다음부터는 학교 현장에서나 수능 시험에서 이념 영역의 비중이 현저하게 약화되었다. 다만 사범대학 윤리교육과의 교육과정에만 이념 관련 교과목이 아직도 다수 존재한다. 윤리과의 세 권 교과서 중에 철학 및 윤리 내용을 다루는 <윤리와 사상>만 실제적인 기능을 하고 있다면, 윤리과도 이제 사회 영역이 아니라 인문 영역으로 자리를 변경하는 것이 명실상부하다고 생각한다. 즉 순수 철학과 윤리 그리고 논리(학)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되면 사회과학 영역에는 (일반)사회와 지리만 남게 된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정치·경제·사회·문화·법, 한국지리·세계지리·경제지리 등만 광의의 사회과학 영역에 남게 된다. 나는 이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 한편 인문학 영역에는 한국어, 문학(한국문학, 세계문학), 역사(한국사, 동양사, 서양사), 철학(철학일반, 윤리학, 논리학) 등이 속하게 된다.

그리고 통합사회과는 당장은 어렵다고 본다. 왜냐하면 한국의 학자들이 아직 통합학문을 제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학자들도 하지 못하는 통합을 서양에서 한다는 이유와 당위성만 가지고 중고등학교에서 하라고 강요하는 것은 무리이다. (학문 선진국인 미국의 경우에도 고학년으로 가면 말만 통합이지, 융합이 아니라 단순한 나열식이다.) 학자들이 통합적인 이론과 학문을 정립한 이후에나 교과서에 반영할 수 있고, 예

비교사들에게 교육을 할 수 있다. 몇 년 전에 공통사회를 강조한 적이 있었는데 공통사회 교과서의 절반은 지리(학) 개론이고, 나머지 절반은 일반사회(사회과학 개론)로 구성되어 있다. 말만 공통사회지 실제로는 전혀 통합사회가 아니다. 지리와 (일반)사회 내용을 단순하게 나열하여 한 권의 책으로 묶어 놓은 것에 불과하다. 이것은 명실이 불일치한다. 다만, 초등학교 수준에서는 통합사회가 가능하다고 본다.

나는 통합사회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것이 바람직하고 좋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나 자신이 사회과학 · 지리 · 역사 · 윤리의 내용을 총망라한 종합적이고 통합적인 교과서를 저술할 능력이 없고 자신이 없으므로 마음속의 이상(꿈)으로만 간직하고 있다. 그런데 통합사회를 강력하게 주창하신 분들이 왜 진정한 통합사회 교과서를 집필하지 않으셨는지 궁금하다. 나는 진심으로 훌륭한 통합사회 교과서를 만나 보고 싶다. 이런 교과서가 집필된다면 대학의 교양과정 교재로 사용해도 좋을 것이다. 현재 대학의 사회과학 개론도 대부분 사회과학 각 학문들의 기초적인 내용을 합쳐놓은 무크지 형태이다.

통합사회의 이상은 멋지다. 그러나 그 이상을 실현할 실천가가 아직 나타나고 있지 않다고 본다. 실천능력도 없는데 당위성만 가지고 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하면 많은 혼란과 갈등만 야기된다. 정책은 실현 가능한 것만 추진해야 한다. 공통사회의 꿈도 한바탕 말잔치로 끝나고 말았다. 그런데 최근에 교육부에서 이것을 다시 추진한다고 한다. 과연 성공할 수 있을지 궁금하다.

앞에서 과학기술에 대한 무지가 인문사회과학의 발전에 장애가 된다고 했는데, 이에 대한 대안으로는 사범대학 (일반)사회교육과의 교육과정에 최소한 과학사나 기술사, 논리학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3. 언어능력의 문제

우리가 학교에서 공부를 한다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의미로 구분할 수 있다. 하나는 지식공부이고, 다른 하나는 실천(수양)공부이다. 요즘은 학교폭력이 커다란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데 학생들의 언어폭력도 심각하다. 욕설을 입에 달고 다니는 학생들도 있다. 거친 말을 사용하면 생각과 행동도 거칠어진다. 그리고 은어의 사용도 심각한 수준이다. 어느 시대나 청소년들은 은어를 사용하지만 오늘날의 은어는 도를 넘었다.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 말들이 넘쳐나고 있다. 잘못된 언어를 사용하면 생각도 그에 따라간다. 그러므로 수준 낮은 언어의 사용은 학생들의 학업에도 분명 장애가 될 것이다. 이것은 학습 측면과 인성교육 양쪽에 다 문제가 된다. 이 점을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에게 분명하게 알려주어야 한다.

지식공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개념을 이해하는 것이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사회과학 용어들은 어렵다. 한자교육이 (일반)사회과가 감당할 문제는 아니지만, 한자 습득이 사회과학의 개념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되는 것만은 분명하다. 그리고 어려운 용어를 쉽게 풀어서 사용하려는 노력은 학자들에게나 교사들에게나 모두 중요하다. 이 점은 학생교육에도 중용하지만, 한국의 학문을 주체화하는 첫 걸음이다. 쉬운 한국어로 학문을 해야 진짜(주체적인) 한국의 학문이 된다. 어휘력을 향상시키는 방법은 좋은 책(고전)을 많이 읽히는 것이 가장 좋다. 그리고 토론과 글쓰기 수업을 통해서 지도하는 것도 좋다.

4. 교육 행정적인 문제

(일반)사회교사 자격증의 남발에 대해서는 관련 학회와 교사협의회 등이 손을 맞잡고 대처해야 한다. (일반)사회가 사회 현실을 다루는 교과인데, 실제로는 사회 문제에 아주 소극적이고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교육과정 자율화와 집중이수제 문제도 적극 대처하여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한국사의 수능 필수화 방안이 진행되면서 한국사 수업을 집중이수제에서 제외시키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 기회에 집중이수제 자체를 폐지하도록 여론을 조성해야 한다. 한편 수능 선택과목 축소와 시험문제 출제에 대해서는 단순한 찬반이 아니라 심층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그리고 앞에서 말한 바 있는 과거 부전공 연수에서 공통사회 교사로 바뀐 예체능 교사들을 예체능 교육을 강조하는 마당에 이제 그들의 원래 교과로 되돌아가도록 해주어야 한다. 이는 전과한 부전공 교사들이나, 그들에게 배우는 학생들, 그리고 예비 사회과 교사들 모두에게 바람직한 일이다. 이 일을 학회 차원에서 거론해야 한다.

5. 교육과정 총론의 문제

이제는 교육과정을 수시로 개정하는 체제로 바꾸었으므로 타 교과와 구별되고 상위(한국교육 전체)의 교육목표와 확실하게 구별될 수 있는 (일반)사회 교육과정의 총론을 수립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야 (일반)사회의 정체성을 확보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과목 명칭을 바꾸는 문제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고민을 해야 할 것이다.

6. 수업 방식의 문제

사회과학의 목표는 이론을 만들고 그것을 통하여 현실을 설명하며, 미래를 예측하고 대비하는 것이다. 문제는 남이 만든 이론을 암기하는 것만으로는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스스로 이론을 만들어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초·중·고 시절부터 사실(사회 현실)에 대한 관심을 갖고 분석·비판·종합하는 훈련을 쌓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토론 등 다양한 수업 활동이 이루어져야 한다.

다양한 수업활동에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인지적 측면뿐만 아니라 민주 시민이 되기 위한 인성과 실천적 측면에 끼치는 영향도 매우 크다. 가치·태도·인성·이념 교육도 이런 학생 참여 수업과정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 그러나 다 아는 것처럼 수능 시험이 이를 가로막고 있다. 더불어 자신의 전공 이론을 많이 가르치고 싶어 하는 학자들의 욕심과 이기주의가 한 몫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다양한 수업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교사에게 실질적으로 많은 수업 재량권을 부여해야 한다. 그래야 학생들이 (일반)사회교과에 대해 흥미와 관심을 갖게 된다. 또한 (일반)사회가 암기 과목이라는 인상을 벗어나야 한다. 지금까지 (일반)사회가 암기 과목이라는 별명을 갖게 된 까닭도 이론 중심의 주입식 교육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의 성격이 과거와 많이 달라졌다. 요즘 학생들은 과거와 달리 선진국에 대해서 그리 관심이 많지 않다. 그러므로 선진국의 이론을 가르치면 흥미가 떨어진다. 따라서 거듭 말하지만 선국의 이론을 많이 가르치려고 욕심내지 말고, 우리의 사회문제를 토론 중심으로 가르쳐야 그나마 흥미를 끌 수 있다. 그리고 결과 중심보다는 과정 중심으로 수업을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과서의 분량을 줄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내용 자체를 줄여야 한다. 교수들이 자기 전공 분야 내용을 많이 반영하려는 욕심을 버려야 한다. 다음 교육과정 개정 때는 이 점을 명심해야 한다.

교과서와 교사가 기존의 이론적 지식을 주입식으로 전달하기 보다는 사회문제의 토론을 통하여 귀납적으로 이론을 찾아가는 수업이 중심이 되어야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수업이 귀납적으로만 이루어져서는 안 되고, 귀납과 연역의 적당한 조화가 필요하다.) 물론 이런 수업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수능시험 폐지, 교사의 수업 시수 및 행정 업무량 감소, 교과교실 확보와 활성화, 수업준비 철저 등 많은 선행조건이 해결되어야 가능하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일반)사회의 형편이 너무나 심각한 위기에 빠져있으므로 열악한 조건이지만 교사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나름대로 노력을 해야 한다. 수학과에서 스토리텔링을 도입하는 마당에 (일반)사회에서 이것을 학술적 논의로만 그칠 것이 아니라 당장 실천해야 한다. 그런 분위기를 학자·교수들이 열어주어야 한다.

7. (일반)사회의 인문학적 접근과 인성교육

몇 년 전부터 한국 교육계의 화두는 학교 붕괴, 공교육 붕괴, 교실 붕괴 등으로 요약되었다. 그러더니 최근에는 왕따와 학교폭력 그리고 청소년 자살로 온 나라가 뒤숭숭하다. 사회학자 뒤르켐도 갑작스러운 자살율의 증가는 커다란 사회문제의 반영이라고 갈파했다. 이는 분명 심각한 문제이다. 이렇게 된 데에는 많은 원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것이다. 여기서 그 얘기를 다 할 수는 없고, 이 글의 주제에 국한해서 언급해보자.

대학 입시와 수능시험은 말할 것도 없고, 예체능 시수의 축소로 장기간 해당 교과목의 신규 교사 임용도 없었다. 예체능 수업을 하지 않아 학생들의 정서가 메마르고 스트레스가 쌓였다. 또한 앞에서 말한 학교장 자율의 교육과정 운영 결과 영어와 수학의 시수를 늘리는 대신 사회과의 시수도 줄었다. 그래서 인성교육이 약화되었다. 그리고 집중이수제로 한 학기 만에 교과 진도 나가기에 바쁘다. 심지어 이 때문에 담임교사와 한 학기 동안 만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학교폭력이 국가적인 문제가 되자 예체능교육의 강화, 특히 체육교육의 강화를 해법으로 제시하고 있다. 물론 예체능교육은 강화되어야 한다. 여기에 인성교육의 강화도 보태야 한다. 인성교육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교과목은 광의의 사회과와 인문교과 그리고 예체능교과이다.

나는 여기서 (일반)사회가 이념교육은 물론 인성교육에도 더 깊이 관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일반)사회 수업에서 사회과학적 지식을 공부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민주시민의 자질을 기르기 위해서는 지식교육과 동시에 정의적이고 실천적인 활동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사회과학은 본래 인간과 사회에 대해 탐구하는 것인데, 지금까지 사회과학은 사회에 대한 연구와 교육에 치우쳤던 감이 있다. 이제 그동안 사회과

학에서 소홀히 다루었던 인간에 대한 관심을 늘려서 연구와 교육에도 반영해야 할 것이다. 그래야 온전한 사회과학이 된다. 사회정의와 공동체 생활, 타인에 대한 관심과 배려 등을 (일반)사회의 수업에서 중요한 주제로 다루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반)사회가 사회과학적 접근만 해서는 부족하고 인문학적 접근을 동시에 해야 한다. 사회과 교실에서는 합리적이고 냉철한 지식인을 기르기 위한 노력과 함께 따뜻한 마음을 가진 후덕한 인간을 기르는 노력도 해야 한다. 참다운 민주시민이 되기 위해서는 지식과 함께 실천적 의지도 필요하다.

교과에서 무엇(어떤 내용)을 강조해서 가르칠 것인가는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당시 사회의 흐름과 필요에 따라 달라져야 한다. 오늘날 한국의 (일반)사회교육에서는 이념교육과 더불어 인성교육이 강조되어야 한다는 것이 나의 생각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범대학 (일반)사회교육과의 교육과정에서 사회윤리와 사회과학의 철학 혹은 사회과학방법론(사회조사방법론이 아님)이 더 강조되어야 한다.

8. 임용고사 문제

시험은 중요하다. 수험생은 시험의 유형에 맞추어 공부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임용고사 시험 문제가 사범대학 (일반)사회교육과의 교육과정에도 많은 영향을 끼친다. 그런데 시험은 수험생만 힘든 것이 아니라, 시험문제를 출제하고 채점하는 사람들에게도 역시 어려운 일이다. 더구나 취업이 힘든 현재 한국사회의 상황에서 인기 직종인 교사의 선발을 위한 교원임용고사는 사회적 관심의 대상이다. 따라서 시험문제의 출제와 채점은 부담스러운 일이다.

2013년 12월의 시험에서 선다형(객관식) 문제를 제외시킨 점은 크게 환영한다. 그리고 지금처럼 괄호 안에 용어 쓰기, 짧게 개념 설명하기, 반 페이지 정도의 짧은 서술형 문제 유형은 좋다. 이 문제의 내용들은 모두 개론서 수준의 사회과학 이론들이다. (일반)사회 교사가 개론서 수준의 사회과학 지식을 아는 것은 당연하다. 따라서 이런 시험문제를 출제하는 것은 옳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현재의 (일반)사회 전공 임용고사에 조금 보완할 점을 제안하려고 한다. 나는 시험문제의 범위를 개론서에 국한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견을 달리한다. 위에서 언급한 세 가지 유형의 시험문제 외에 사회과학 고전을 다수 포함시킬 것을 제안한다.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법 · 철학(혹은 윤리) 등의 중요한 고전들을 읽게 하고, 문제도 지금처럼 반 페이지 정도의 짧은 서술형이 아니라 긴 논술문을 쓰게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이런 논술 문제를 출제할 경우 답안지 채점에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런 행정적인 문제 때문에 이것을 시도하지 않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고, 그런 문제는 조금만 신경을 쓰면 해결할 수 있다. 그래야 학생들이 깊이 있는 공부를 하고, 글쓰기 훈련을 제대로 할 수 있다.⁵⁾ 학창시절에 이런 공부와 훈련을 한 학생이라야 교사가 된 후에 능숙하게 교사가 아니라 창의적인 (일반)사회교사가 될 수 있고, 그런 교사가 창의적인 (일반)사회교육을 할 수 있다.

(일반)사회 교과교육론 강의에서 다양한 수업 방법에 대하여 가르치고 실습을 해보아야 한다. 그런데 그런 방법을 강의실에서 학습하는 것과 교사로서 학생들에게 수업에 활용하는 것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다. 교사로서 주입식 수업이 아니라 다양한 학생 참여 수업을 전개하다보면, 개론적 지식이 아니라 그 이상의 상

5) 이는 사범대학 (일반)사회교육과의 '사회과의 논리 및 논술' 교과과정의 정상적인 자리매김에도 기여할 것이다.

상력과 통찰력이 필요함을 느낄 것이다. 그럴 경우에 빛을 발휘하는 것이 독서의 힘이다. 독서를 통해서 그런 능력이 길러지고, 거기에서 창의성 교육이 이루어진다.

IV. 맺음말

나는 현재 한국의 (일반)사회교육은 위기의 상황이라고 보고, 그 원인과 대책을 제시했다. 거기에는 우리의 노력으로 개선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우리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의 힘으로 개선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하여 합심하여 노력할 필요가 있다.

나는 오늘날 한국 (일반)사회교육의 핵심은 이념교육과 인성교육이 시대적 요청이라고 생각한다. 지금 학교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교실 붕괴, 학교 폭력 문제 등은 내외의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외적으로는 80년대 맑시즘의 유행과 90년대 포스트모더니즘의 영향으로 권위가 부정되는 사조가 널리 퍼져 학교와 교사의 권위도 함께 무너진 요인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 이것은 학생들보다 오히려 지금의 학부모들에게 더 직접적으로 해당된다. 학부모들의 생각과 태도가 그 자녀인 학생들에게 영향을 끼쳐 현실로 드러나는 것이다. (자녀는 부모의 거울이고, 학생은 교사의 거울이다.) 교육 내적으로는 앞에서 말한 것처럼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에서 국·영·수를 강화하고 예체능과 넓은 사회와 및 (일반)사회를 확대하여 인성교육을 소홀히 했기 때문이다. 학부모·학교·사회·국가가 모두 일치단결하여 지식교육만을 강조한 결과 오늘날 실력 있는 지식인들은 많지만, 지성인이 아닌 지식인들이 그들의 지식을 사용하여 세상을 어지럽히고 파괴하는 일에 사용하는 경우를 자주 목격하게 된다.

늦게나마 예체능교과를 강화하는 움직임은 다행스럽지만, 아직 범 사회과교육의 중요성을 인지하지 못하는 점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한다. 여러 사회과교육 관련 학회들이 합심하여 행정 당국에 이런 점을 상기시킬 필요가 있고, 일반사회 뿐만 아니라 범 사회과교육에서 인성교육 측면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앞으로는 학부모의 참여가 높아질 것이다. 장기적으로 볼 때, 학창시절에 (일반)사회에 관심과 흥미가 있었던 학생들이 학부모가 되었을 때 (일반)사회교육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일반)사회를 주요 교과로 만드는데 협조할 것이다. 지금의 학생들은 현재의 고객일 뿐만 아니라 미래의 더 큰 잠재적 고객임을 알아야 한다. (일반)사회 교사들은 학생들에게 수시로 (일반)사회교육의 성격과 필요성 및 당위성에 대하여 강조를 해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일반)사회교육의 결과가 실제의 사회생활에 도움을 주어야 하고,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그렇게 느끼고 동의를 해야 한다. 우리 모두의 분발이 필요하다.